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AI 기술의 도시재생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장민영
수탁 과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유광흠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및 확산 방안 연구	성은영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컨설팅 지원	김영현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	박태홍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정책 활용 지원 연구	신치후

수시과제

❶ AI 기술의 도시재생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4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약 640여 곳으로 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쇠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보인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전환,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재생 정책은 실행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과제가 점차 더 다층화되고 있다.

한편, 초거대 언어모델(LLM),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도시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AI는 대규모·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정책 수립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잡한 행정절차의 자동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 도시재생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정책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의 개념과 활용 유형을 정리하고, 도시재생 정책 전 주기 계획·실행·운영·사후관리에 걸친 단계별 적용 분야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정밀 진단과 예측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사업 실행 및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참여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AI 기반 도시재생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영

수탁과제

❶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부동산개발사업은 건설업, 설계·엔지니어링, 금융·투자, 부동산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집약된 복합 산업으로,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주택공급과 건설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기조, 경기 둔화, 인허가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사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복잡성,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 지연,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주민 반대에 따른 갈등 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업 기간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추진 자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는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시스템 구축, 명확하고 일관된 법령 해석 기준 마련,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협력적 소통체계 확립, 주민 소통 강화 및 영향평가 제도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흠

❷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및 확산 방안 연구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문화·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주체이기에 각 지역에서는 청년인구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실업, 불안정한 주거, 누적되는 부채 등 청년이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2023년 개정된 법률에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5년 2월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청년친화도시는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등 본질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도시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청년친화지표를 마련하여 각 도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운영·평가·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청년친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며, 개별 청년친화도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한다. 더불어 우수사례의 전파와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와 자율적 성과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자원 배분 근거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제적 지표와 비교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친화도시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청년친화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은영

3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컨설팅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현안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자원 조달 방안의 불확실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여 계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 계획을 수립했던 지자체는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현안에 맞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 환경, 도시계획, 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데스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대해 스마트도시 개념과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2단계, 계획안이 구체화된 중간단계에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하여 계획안에 대한 도시문제 진단, 서비스 도출 과정,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자문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단계에서는 최종 계획안이 전문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나아가 이미 승인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연차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계획이 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

사업의 컨설팅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향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

통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김영현

4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

부여군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유한 역사문화도시로, 매년 백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유적지 간 연결성, 체계적인 안내·해설 시스템, 공공 편의시설 등 세계유산 향유를 위한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기본계획’(2023년)이 수립되었으며, 본 과제는 그 후속 절차인 건축기획과 설계공모 관리에 중점을 둔다.

과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의 규모, 입지, 배치, 공간 구성, 기능 등을 구체화해 설계공모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둘째, 설계공모의 기획·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자 선정을 지원한다. 셋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성 반영, 공공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축기획을 통해 향후 설계·공사 단계의 안정적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과업은 현장 조사,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 유사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건축기획안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공사 단계까지 연계되는 체계적 관리의 기반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제는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를 백제왕도 핵심 유적 간 연계를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전달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특화형 공공건축의 선도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박태홍

5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정책 활용 지원 연구

역사문화자원은 지정·등록되지 않은 향토·미래유산 등을 포함하여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법적 보호체계 밖에 놓여 멸실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 보호주의에서 모든 국가유산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되었으나, 법적 보호체계가 미흡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비지정·등록 문화유산 10만 181건을 조사하고 현황을 DB화하였다. 이를 통해 오류 검증, 신규 자원 발굴, 멸실·중복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지만, 데이터 오류와 현황 변화, 지역별 관리 역량 부족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조사 성과를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DB의 지속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은 단순한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이 어렵기에 정부·지자체·민간 주체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전수조사로 구축된 역사문화자원 DB의 지속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역사문화자원 관리, 활용 매뉴얼’(가칭)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신치후

포럼 및 세미나

auri 소식
—
Vol. 59
Autumn 2025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농촌공간계획연구위원회 공동세미나 ‘도시·군기본계획과 농촌공간기본계획의 쟁점: 공간구조와 생활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농촌공간계획연구위원회는 7월 17일(목)에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농촌공간기본계획의 쟁점 : 공간구조와 생활권’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사회를 맡은 유승호 리플랫폼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이광명 KG엔지니어링 이사가 ‘2040 부여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와 생활권’을,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가 ‘부여군 2034 농촌공간기본계획의 공간구조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발표하였다.

이어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 남궁성 부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팀장, 이현진 부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주무관, 윤희택 부여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주무관, 문채 성결대학교 명예교수,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 실장, 조준배 유진도시건축 본부장, 김형구 어반 플랫폼 대표, 신수환 지역경영전략연구소 이사가 참여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두 계획의 연계와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 제3, 4회 보행공정포럼 개최



CPTED 토론회 ‘더 안전한 커뮤니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회는 인스파이어비즈니스센터에서 2025 제3, 4회 보행공정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두 번의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다.

2025년 보행공정포럼은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포럼’이라는 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공감과 소통,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첫 번째 포럼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제2회 포럼을 열어 ‘보도 위 이론차 통행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8월 1일(금)에는 제3회 포럼이 ‘보행자의 행태와 심리를 고려한 인파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려, 다중 밀집 공간의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보행도시 조성의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9월 5일(금)에는 ‘공원녹지 등 여가공간에서의 보행안전’을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2025 보행공정포럼은 보행 안전과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보행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30주년을 기념하여 9월 2일(화)에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CPTED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 안전한 커뮤니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라는 주제 아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CPTED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의 개회 인사와 함께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성기용 한국셀테드학회 회장,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생활안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K-CPTED의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표에서는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안전연구팀장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장이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으로서 법률 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경훈 건축성능원 교육시설안전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오식 동작구청 공공디자인 팀장, 이경선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장이 참여하여 CPTED의 현황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CPTED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윤준병 국회의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9월 1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5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과 연계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린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시·군 단위 계획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주제 발표에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장이 나서 'K-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세 가지 모델을 제안하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생활인구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토론회에는 이유직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 회장, 이상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황중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여하여 농촌공간정책의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농촌공간정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연구원 단신

auri 소식
—
Vol. 59
Autumn 2025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8월 12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어촌·어항 재생 및 연안공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도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어촌·어항 재생 및 연안공간 관련 분야의 공동 연구 발굴, 수행하고 해양 관광 및 연안 도시개발 관련 학술자료 교류, 학술행사 및 세미나 등 공동 개최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은 "연안지역의 통합적 공간 전략 마련이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융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간혁신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성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안공간 및 어촌정책 분야 전문성을 결합하여, 어촌·어항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충북연구원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지역 개발과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지역 건축·도시 분야 현안 해결과 정책연구 협력을 위하여 8월 25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건축·도시 분야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연구 인력, 학술자료 교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및 협조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제공 및 발간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지역 개발과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농촌의 정주여건 및 빈집 발생 특성과 관리 방향’을 시작으로, 한승석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충북 농촌마을 인구현황과 정책방향’ 발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항집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변혜선 충북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 홍성호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 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29일(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 공간정보정책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구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간정보-건축기술 융합 데이터 혁신 사업을 발굴, 수행하고 공간정보·건축 관련 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적 통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그동안 축적해 온 공간 데이터와 건축·도시 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재난·안전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등 국가 공간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9월 17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촌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한 농촌공간중앙지원 기관으로서 업무 협력 ▲농촌공간정책 분야 학술행사,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참여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전문 컨설팅 과제의 공동 기획 및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지난 30년간 농촌의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고령화율이 5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간혁신·도시재생 전문성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하였다.